

인건비 부담에 고용 줄이고 자동화로 살 길 찾는 업체들

경쟁력 떨어지는 업체 '폐업 도미노' 일어날까 우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환영 분위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잇따라 쓰러지는 '폐업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자동화를 통한 직원 감원과 근무시간 축소, 가족경영 확대, 상품가격 인상 등 인건비 폭탄을 피하기 위한 갖가지 방편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불행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혼돈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중소기업 5곳 중 1곳만 "채용계획 있다" =갑작스런 고용정책 변화에 중소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공장 자동화 등으로 살길을 찾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전국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2018 중소기업 경기전망·경제환경 전망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 5곳 중 1곳꼴(18.1%)로만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는 '미정'(40.6%)이거나 '채용계획이 없다'(41.3%)고 답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직원 수 30명 미만 영세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평동산단에 있는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확정될 경우 현재 2교대를 3교대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 신규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직원들도 근로시간 감소로 임금이 삭감되

면 이직을 고려하게 돼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질 임금 오른다" vs "일자리 보존 어렵다" =중소기업 경영자와 소상공인의 우려와는 달리 당장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급여를 받게 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남산단의 금속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김모(38)씨는 "연장근로 수당까지 합하면 한 달 급여가 70만원 이상 올라 직원들은 내심 좋아하고 있다"며 "내 월급은 3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들의 연령이나 직종, 정규직 여부 등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고용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게 되면 당장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자리가 위태로워지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경비 등의 업무를 하는 고령 근로자들은 월급은 적게 받더라도 꾸준히 일하기를 원하지만 업계에선 정리 대상 1순위가 된다. 기업이나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업무를 무인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고용을 줄이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올해보다 15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지역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면



국민의당 원외지역위원장인 홍훈희 변호사(오른쪽·서울 강남갑)와 한웅 변호사(서울 은평갑)가 25일 서울시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당직실을 찾아 27일부터 예정된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 당원 투표'에 대한 가져분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주와 근로자들의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인건비 상승에 따라 중소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지기 마련"이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과 비정규직이 많은 기업들의 타격이 커 폐업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통합과 "속전속결 돌파" 반대파 "나쁜투표 거부"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D-1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안철수 대표의 신임을 연계한 전당원 투표를 이를 앞두고 통합 찬성·반대 진영의 치열한 세력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당원투표에서 통합 찬성과 안 대표의 재신임이 이뤄진다 해도 정당대회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파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안철수 대표 측은 전당원 투표에서 통합 찬성과 재신임을 기정사실화한 채 바른정당과의 통합 드라이브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 반드시 녹색의 새싹을 틔우는 봄이 우리에게 올 것을 믿는다"며 통합 반대 진영의 반발을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전당원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또 새해부터 이뤄질 바

른정당과의 통합 협상에 대비, 교섭 창구로 이언주, 이태규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바른정당은 오신환, 정운천 의원을 교섭 창구 역할을 맡는다. 안 대표 지지자들은 26일 오후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당 통합 추진에 힘을 신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및 당원들로 구성된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전당원투표 금지 가져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투표는 정당성이 없으므로 중단해야 하며, 실행되더라도 당규상 의결정족수 33.3%가 적용되는 만큼 이에 못 미칠 경우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명의 현역 의원들이 가져분 신청에 동의, 최악의 경우에 별도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안 대표 진영을 압박했다. 운동본부는 26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보수적폐야합 반

대, 국민의당 사수대회'를 열어 세물이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 소속 지방의원들은 오는 2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 당원 투표 실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다.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은 9명, 구의원은 27명으로 대부분 통합에 반대 입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전남도의원과 전남 시군구 의원들도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전당원투표 반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일반 당원들을 중심으로 투표 반대 움직임도 조직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위원회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전 당원 투표를 보이콧하도록 당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송기석·권은희, 전남 주승용·손금주 "전당원투표 찬성" 바른정당 8명, 박지원·천정배·정동영 통합 정당 합류 부정적

김동철, 가져분신청 참여 안해

광주·전남지역 국민의당 의원들 대다수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묻는 전당원투표 실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송기석, 권은희 의원과 전남의 주승용, 손금주 의원은 전당원투표 찬성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우선 호남 중진들 가운데 유일하게 전당원투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주승용 의원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25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다만 호남 당원들이 60%에 이르고 있어

통합에 대해 당원들의 뜻을 묻자고 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파국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손금주, 권은희 의원과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송기석 의원은 통합을 둘러싼 당의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전당원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전당원투표 금지 가져분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전당원투표 찬성 입장을 보인 4명과 김동철 원내대표 등 5명으로 나타났다. 김 원내대표 측은 가져분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데 대해 "당의 원내대표로서 중립적 입

장을 견지하기 위한'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가져분 신청 참여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바른정당 11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통합 찬성은 9명, 조건부 찬성은 2명으로 나타났다. 또 8명의 의원들이 국민의당 호남 중진인 이른바 '박·정·천(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의 통합 정당 합류에는 부정적이었으나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총량신청은 전국 어디서든 1588-7704
지적총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지적총량·공간정보 전문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